

03

양차대전 시기 체코슬로바키아의 안보전략과 외교정책

■ 김신규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체코어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박사

주요 논저

「21세기 공존패턴으로서의 유럽연합: 바츨라프 하벨(V.Havel)의 유럽과 유럽연합에 관한 사상 연구」(2009)

「중동부유럽의 유로-회의론(Euro-scepticism) 연구」(2008)

"Disputes over the European Constitution and Euro-scepticism in Czech Republic"(2008)

Contents

- 1 머리말
- 2 집단안보, 균형(동맹) 그리고 편승과 유화
- 3 제1공화국 시기의 외교정책
- 4 뮌헨협정
- 5 뮌헨협정 이후의 제2공화국
- 6 맺음말

본문에서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외교정책의 방향을 간략히 논의하고, 제1공화국 시기 외교정책의 근간인 집단안보와 동맹 그리고 직접적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의 자구책을 살펴본다. 그리고 실제 강대국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이들이 선택한 전략이 무엇이었는지를 논의하면서, 결국 약소국의 선택은 제한적이거나 거의 없으며 그러한 제한적 선택으로 인해 약소국의 안보는 언제나 위협받을 여지가 있음을 체코슬로바키아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양차대전 시기와 1993년 이후의 외교, 안보전략을 비교해 보면서 탈냉전 이후에도 체코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극히 제한적임을 확인한다.

탈냉전 이후 체코는 여전히 '뮌헨'에서 서유럽국가들의 배신과 이후 인접한 폴란드, 헝가리의 침략을 기억하고 있으며, 독일과 러시아라는 양편의 위협을 모두 인지하고 있어 친미를 중심으로 소위 '친 - 대서양주의(pro - Atlanticism)'를 군사적인 측면에서 안보의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주제어

체코슬로바키아, 뮌헨협정, 동맹, 세력균형, 집단안보, 소삼국협상

1. 머리말

강대국의 위협에 맞서는 약소국의 안보전략은 무엇일까? 더군다나 그 약소국이 국경을 면하고 있는 모든 국가와 국경 분쟁을 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는 어떤 외교정책과 안보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 또 국경 내 국가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여러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을 경우 해당 국가의 외교와 안보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제1공화국 시기(1918~1938)에 해당된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생겨난 국가다. 당시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을 포함하여 독일인과 헝가리인 그리고 카르파티아 루테니아인과 폴란드인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였다.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 사이의 민족주의는 논외로 하더라도, 독일과 국경을 면하고 있는 수데텐 지역에 집단 거주하는 300만 명의 독일인과 헝가리와의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75만 명 이상의 헝가리인들, 그리고 폴란드와의 국경지대인 테신 지방에 살고 있던 폴란드인 문제는 국내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였고 외교정책과 안보전략을 결정하는 요인이

었다. 더군다나 인접국들이 모두 비민주 정권이었다는 점은 체코슬로바키아가 처한 위기의 환경 요인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문에서는 양차대전 사이 동유럽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였던 체코슬로바키아가 생존을 위해 어떤 외교정책과 안보전략을 추진했는지를 살펴본다. 약소국의 외교정책은 다분히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결정되지만,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는 주변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내의 복잡한 민족구성 역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1차 세계대전에서 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20년간 체코슬로바키아의 외교정책을 집단안보와 균형(동맹) 그리고 유화와 편승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집단안보는 제1공화국 시기 체코슬로바키아 외교정책의 근간이었지만 여기에 균형을 위한 소삼국협상(Little Entente)이 포함되었다. 유화와 편승은 독일의 위협에 홀로 맞서는 약소국 체코슬로바키아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대안이었으며, 더 이상 집단안보에 의존할 수 없게 되자 선택한 최후의 방법이었고 이 역시 자의적이라기보다는 압력에 굴복한 결과였다. 즉, 독일의 위협에 굴복하고 그들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다만 기존의 전략을 구분하여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당시 체코슬로바키아가 선택한 전략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본문은 크게 체코슬로바키아의 외교정책의 방향을 간략히 논의하고, 제1공화국 시기 외교정책의 근간인 집단안보와 동맹 그리고 직접적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의 자구책을 살펴본다. 그리고 실제 강대국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이들이 선택한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논의하면서, 결국 약소국의 선택은 제한적이거나 거의 없으며 그러한 제한적 선택으로 인해 약소국

의 안보는 언제나 위협받을 여지가 있음을 체코슬로바키아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양차대전 시기와 1993년 이후의 외교, 안보전략을 비교해 보면서 탈냉전 이후에도 체코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극히 제한적임을 확인한다.

2. 집단안보, 균형(동맹) 그리고 편승과 유화

집단안보와 균형 그리고 편승과 유화는 강대국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약소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다. 전후 집단안보는 1차 세계대전이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유럽의 세력균형 와해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베르사유체제를 주도한 미국의 윌슨(W. Wilson)은 주권 국가 간의 세력균형에 의한 무정부적인 국제정치 대신 집단안보 원칙에 기초한 국제기구의 창설을 통해 국제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로써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는데, 국제연맹의 기본적 인식은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침략행위를 회원국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일제히 대응함으로써 전쟁을 미리 억제한다는 것이며,¹⁾ 만약 전쟁 역지가 실패하고 실제로 침략행위가 발생한다면 모든 국가가 침략국을 응징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었다.²⁾

집단안보 원칙은 국제연맹규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10조에서는 국가들은 모든 회원국이 침략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을 약속했다.

1) 하영선, 남궁근 편저, 『변환의 세계정치』(서울: 을유문화사, 2007), p.59.

2) 이상의 집단안보의 원칙은 실제로는 국가들이 강력한 연합을 형성하여 침략을 막고자 한다는 점과 역지가 실패할 경우 힘을 사용할 용의가 있다는 점에서 세력균형과도 유사하다. 조지프 나이, 『국제분쟁의 이해』, 양준희 옮김(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 p.133.

제11조는 전쟁 또는 전쟁의 위협은 모든 국가의 관심사라고 선언했으며, 제12조와 제15조에서는 국가들은 분쟁을 중재에 맡기고 중재가 실패한 후 3개월이 경과되면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제16조에서는 국제 연맹의 절차를 무시하는 그 어떤 전쟁도 모든 회원국을 상대로 한 전쟁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했다.³⁾

이렇듯 국제연맹은 연맹에 가입한 회원국들에게 집단안보를 보장함으로써 전쟁을 방지하고 이상적인 국제질서를 수립할 수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국제연맹이 제시하는 집단안보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했고 개별 국가들이 어떤 상위의 권위에도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간 무정부체제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흔히 세력균형은 위협을 당하는 국가들이 위협한 적국에 대항해 힘을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가들이 침략자에 대항, 전쟁을 억지하는 부담을 함께 나누거나 혹은 전쟁 발발 시 함께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⁴⁾ 세력균형을 권력분배, 정책 그리고 다극체제로 정의할 때, 세력균형은 '동맹'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동맹은 국가가 각자의 안보를 확인하기 위해 맺는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협정을 의미한다. 중간 규모의 두 국가가 동맹을 형성함으로써 한 강대국의 위협으로부터 좀 더 안전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⁵⁾ 결국 동맹은 안보를 위해 둘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가 연합해 위협국의 위협을 저지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전략이다.

3) 나이(2000), pp.133~134.

4) 존 J. 미어세이머, 『강대국 국제정치: 미국의 비극』, 이훈근 옮김(서울: 나남출판, 2006), p.278.

5) 나이(2000), pp.98~107.

이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편승은 약한 측의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즉 균형이 약한 측과의 동맹이라고 한다면, 편승은 강한 측과의 동맹을 의미한다.⁶⁾ 편승전략이 근거하는 가정은 상대방에 비해 열세인 국가가 강한 국가의 요구에 대항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강한 국가는 어떤 경우라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군사력을 통해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에서 강한 국가는 약한 국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하게 될 것이다. 약소국은 강대국이 자비로운 국가라는 점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⁷⁾ 결국 약소국은 “당해야만 할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편승이 적대적인 강대국에 홀로 대항해야 하는 약소국이 택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라고는 하지만,⁸⁾ 동시에 미어세이머(J. J. Mearsheimer)에 의하면 편승과 유화정책은 약소국이 피해야 할 전략(strategies to avoid)이다.

유화정책은 위협을 당하는 국가가 위협국에게 양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유리한 세력균형을 만들어 준다. 주로 제3국의 영토 중 적어도 일부 혹은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침략국의 행동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직접 침략의 위협을 당하는 국가의 경우는 자신의 영토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침략국의 의도를 누그러뜨리려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약소국은 피해야 할 전략인데, 위협한 적대국을 친절하고 부드러운 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유화정책은 침략국의 정복 욕구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게 된다. 2차 세계대전 직전 영국과 프랑스의 유화정책이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였으며, 독일에게 자국의 영토

6) Stephen M. Walt, *Origins of Alliances* (New York: Cornell Univ. Press, 1987), p.263.

7) 미어세이머(2006), pp.322~323.

8) Walt(1987), p.263.

일부를 양도한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가 그랬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제1공화국 시기(1918~1938)의 외교정책과 안보전략을 집단안보와 균형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4장에서는 1938년 9월 뮌헨협정 이후를 유화와 편승의 측면에서 검토한다.

3. 제1공화국 시기의 외교정책: 집단안보와 균형

이 시기 체코슬로바키아 외교, 안보정책의 근간은 집단안보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대통령 마사리크(T. G. Masaryk)과 외무장관 베네쉬(E. Beneš)는 국제연맹을 비롯한 집단안보가 특히 중·동부유럽의 지정학적 측면과 체코슬로바키아가 처한 국내 문제를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이전에 이미 마사리크는 중부유럽과 체코슬로바키아의 안보를 위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까지 체코뿐만 아니라 슬라브 민족에게 인기 있었던 범슬라브주의에 반대했다. 범슬라브주의는 범게르만주의에 대항하는 이상적 안보개념으로 게르만의 팽창에 직면한 슬라브 민족의 생존과 안보를 위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슬라브 연대를 의미했다. 그러나 마사리크는 범슬라브주의가 기본적으로 러시아 차리즘에 기반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중부유럽 국가들의 독자적인 안보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오스트로-슬라비즘(Austro-slavism)⁹⁾을 발전시켜, ‘중부유럽’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9) 체코에서 오스트로-슬라비즘은 이미 19세기 체코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팔라츠키(F. Palacký)와 리에게르(F. L. Rieger) 등이 주장한 바 있다. 즉 이들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여러 민족의 연방체제가 체코를 포함한 중부유럽 국가들을 러시아와 독일제국에서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할 것이며 동시에 넓은 시장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F. Palacký, “Idea

마사리크의 중부유럽 개념은 ‘중간에 놓여 있는 유럽(Europe in-between)’으로 요약되는데,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독립 국가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제국주의적인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서 민주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할 수 있다.¹⁰⁾ 마사리크는 이러한 중부유럽이 향후 독일의 ‘동방진출 정책(Drang nach Osten)’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인접한 헝가리 같은 국가에도 민주주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¹¹⁾

마사리크의 중부유럽 개념은 한마디로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수많은 약소국들이 다자간 협력을 통해 집단안보체제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혼합한 개념이었지만, 결국 마사리크의 ‘이상적 균형자’ 개념은 실패했다.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연합이라는 중부유럽의 기본적 전제는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인 체코슬로바키아를 제외하면 여기에 부합되는 국가를 찾기 어려웠고, 이들 간의 협력 역시 1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격화되었던 국경 분쟁으로 인해 기대하기 어려웠다.

독립 이후 체코슬로바키아가 파리평화회담에서 요구한 바는 ‘중부유럽 연맹’을 결성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었다. 이들이 요구한 사항은 우선 첫째, 체코슬로바키아에 보헤미아, 모라비아, 실레지아(슐레지엔) 일부, 루지체(라우시츠), 슬로바키아, 카르파티아 산맥 북동부의 루테니아를 포함시키고, 둘째, 발티츠코, 빌라스토, 홀루친스코 등 당시 독일과 오스트리아 영토 일부가 체코슬로바키아에 포함되어야 하며, 셋째, 오스트리아와

státu rakouského”, <http://citanka.cz/palacky/isrtoc.html>

10) L. Cabada, “Idea střední Evropy v českém prostředí”, in L. Cabada et. al., *Perspektivy regionu střední Evropy* (Praha: Vydavatelství Západočeské Univerzity, 2002), p.17.

11) L. Cabada, “The Czechoslovak Republic in Interwar International Politics”, in L. Cabada and Šárka Waisová(eds.), *Czechoslovakia and Czech Republic in World Politics* (Plzeň: Aleš Cenek, 2006), p.35.

헝가리를 분리시킬 수 있도록 체코슬로바키아와 유고슬라비아(당시는 세르비아 - 크로아티아 - 슬로베니아왕국)를 잇는 회랑을 설치해야 하고, 넷째, 유럽에 있는 강을 국제 공동 관리로 두며, 비엔나에 거주하는 체코인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다.¹²⁾

이러한 요구사항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에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그리고 슬로바키아를 포함해 독일인 거주지역인 슈테터 지역, 헝가리인들이 거주하는 남부 슬로바키아, 그리고 루테니아인이 거주하는 루테니아와 폴란드인이 거주하는 테신 지방이 모두 포함되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영토였던 발티츠코와 빌라스토 그리고 홀루친스코 역시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유고슬라비아에 이르는 회랑지대를 얻지는 못했다. 반면 이러한 영토적 성공은 체코슬로바키아가 다민족국가로 구성되는 문제를 낳았고 인접한 모든 국가들과의 국경 분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야기했다.

결국 중부유럽이라는 이상적 접근은 폐기되었고 체코슬로바키아가 처한 국내적, 국제적 문제를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마사리크와 베네쉬가 완전히 이상주의적 접근 방법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의 외교, 안보정책의 기본방향은 국제연맹을 중심으로 한 집단안보체제에 있었다. 이들은 국제연맹을 집단안보의 핵심으로, 유럽, 특히 중부유럽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보장하는 보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베네쉬는 국제연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1920년대 중반 독일을 국제연맹에 가입시키는 데 주력했고 소련이 중부유럽에서 독일의 영향력 증대에 균형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여 소련의 가입 역시 지지했다.

12) J. Kalvoda, *Genese Československa* (Praha: Panevropa, 1998), p. 405.

또한 베네쉬는 1924년 10월 44개국이 조인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의정서' 즉, 제네바의정서(Geneva Protocol) 채택을 주도했다. 그는 국제연맹을 집단안보체제 그리고 평화적 분쟁해결을 위한 초국가 체제로 재편하려고 시도했다. 제네바의정서는 중재, 안보, 무장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기초했는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우선 협상을 통해 중재를 시도하고 그것이 실패할 경우 국제연맹 국가들이 침략전쟁을 일으킨 국가에 대해 응전을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침략자를 개전국이며, 국제연맹의 조약과 협정을 위반한 국가로 규정했다. 의정서에서는 또한 전쟁을 '국제법외 행위'로 규정하고 침략자에 대항한 모든 수단의 사용을 허용했다. 미국이 국제연맹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의 동의가 필수적이었지만, 영국 보수파는 이에 반대했다. 유럽대륙에서 영국의 직접적인 이해 범위는 라인강 유역까지였다. 영국은 중·동부유럽에서의 영구적인 평화를 믿지 않았고 자신들이 이 지역 문제에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결국 제네바의정서는 실패했다. 이 의정서를 비준한 유일한 국가는 체코슬로바키아뿐이었다.¹³⁾ 동시에 베네쉬는 1932~1933년 국제연맹의 '무기감축협약'에 제네바의정서의 원칙을 삽입하려 했지만 이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영국 역시 유럽의 안보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고 이에 독일 국경의 변경 불가를 명시하는 '로카르노조약(Pact of Locarno)'을 이끌었다. 그러나 로카르노조약에는 독일의 서부 국경 불가성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동부 국경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었다. 로카르노조약은 영국이 유럽정치에서의 영향력 증대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신의 의도

13) A. Klimek a E. Kubů, *Československá zahraniční politika 1918-1938* (Praha: Institut pro středoevropskou prostředí, 1995), p. 51.

가 다만 라인란트와 서유럽에만 한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¹⁴⁾

한편 1930년대에는 총리 호자(M. Hodža)가 소삼국협상 국가와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다뉴브 연맹'을 구상했다. 그러나 소삼국협상의 루마니아와 유고슬라비아에서 비민주 정권이 들어서고 헝가리가 계속해서 체코슬로바키아와의 협력을 거부하면서 이러한 구상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국제연맹이 제공하는 집단안보를 제외하고는 체코슬로바키아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았다. 다만 베르사유체제를 보장하는 서유럽 강대국에 대한 명확한 지향성과 의존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외에도 중부 유럽 국가들 중에서 일부 국가에 한정된 협력과 동맹 구축이 신생 체코슬로바키아 외교, 안보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전후 독일의 동쪽 국경에 특히 관심을 보였던 프랑스가 체코슬로바키아의 생존과 안보의 보장자가 되었다.¹⁵⁾ 1925년 10월 16일 양국은 동맹을 체결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체코슬로바키아의 동맹은 프랑스는 물론 체코슬로바키아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프랑스는 루르 지방을 점령하고 독일에 과도한 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국제적으로 고립되었기 때문에 동유럽 국가, 특히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에 접근한 것이며, 체코슬로바키아는 미국과 영국이 사라진 현실에서 프랑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 프랑스는 동유럽의 안보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오히려 독일의 관심을 서쪽보다는 동쪽으로 돌리려 했다.

프랑스와의 관계 외에도, 체코슬로바키아는 베르사유체제의 보장자였

던 다른 강대국과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영국과는 형식적인 관계에 머물렀다. 베네쉬는 영국과 프랑스를 체코슬로바키아의 안보 보장자로 설정하려고 했지만 프랑스만이 표면적으로나마 체코슬로바키아를 포함한 독일의 동부 국경을 보장하는 유일한 강대국으로 남았다.¹⁶⁾

체코슬로바키아와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루마니아 동맹은 마사리크가 제시한 중부유럽 안보개념과 일치했다. 1921년 4월 체코슬로바키아는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와 각각 조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헝가리 언론에서는 이를 '소협상'이라고 조소했으며, 이 이름이 공식 명칭이 되었다. 소삼국협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오직 하나의 목적만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헝가리의 팽창주의, 즉 실지 회복 시도를 막는 것이었다.¹⁷⁾ 더군다나 이 국가들은 다른 국가 특히 폴란드에게 소삼국협상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폴란드는 여전히 테신 지역에 대한 영토 주장을 하고 있었고 1934년 독일 - 폴란드 동맹이 체결되면서 양국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헝가리는 계속해서 슬로바키아와 루테니아를 요구하며 체코슬로바키아를 적성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프랑스와의 동맹 및 소삼국협상 외에도, 미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등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그러나 미국이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고립주의로 돌아섰고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와의 협력에 집중했기 때문에 체코슬로바키아와의 관계는 그리 우호적이지 못했다. 결국 체코슬로바키아는 중부유럽 국가들 그리고

14) Alexandr Ort, *Česká zahraniční politika* (Plzeň: Aleš Čeněk, 2005), pp.90-91.

15) Ort(2005), p.88; 미어세이머(2006), pp.578-579.

16) J. Dejmek, *Československo, jeho sousedé a velmoci ve 20. století, Vybrané kapitoly z dějin československé zahraniční politiky* (CEP: Praha, 2002), pp.6-16.

17) Dejmek(2002), p.17.

승전국과의 다자 간 동맹을 체결하지 못했다. 당시 체코슬로바키아는 인접국들과 협력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¹⁸⁾

상기한 바와 같이 1차 세계대전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의 외교, 안보정책의 우선순위는 국제연맹 위주의 집단안보체제였다. 그러나 체코슬로바키아는 집단안보에만 의존할 수 없었고 몇몇 국가와의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극복하려 했다. 약소국은 다른 약소국에 대해 균형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월트(S. M. Walt)의 가설대로,¹⁹⁾ 체코슬로바키아는 헝가리에 대해서는 소삼국협상을 체결하는 등의 균형을 선택했다. 루마니아와 유고슬라비아의 경우에도 헝가리의 수정주의 전략과 왕정복고 등에 반대하면서 체코슬로바키아와의 동맹에 찬성했다. 반면 폴란드의 경우는 헝가리와 이해관계가 없었을 뿐더러, 체코슬로바키아와 국경 분쟁 여파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소삼국협상 가입을 꺼려했다. 만약 폴란드가 소삼국협상에 가입했다면 향후 발생하게 되는 유럽에서의 위협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폴란드는 독일에 편승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엄밀히 말하면 소삼국협상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고 소삼국협상과 프랑스의 동맹 역시 완전 실패작이었다. 이런 동맹은 집단안보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세력균형 차원에서도 프랑스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²⁰⁾ 헝가리를 견제하기 위한 소삼국협상 내에서의

분열 역시 헝가리와의 균형을 이룬다는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했다. 루마니아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에 편승했고 유고슬라비아는 분열되어 헝가리를 견제한다는 애초의 목표를 지킬 수 없었다.

이렇듯, 제1공화국 시기의 집단안보와 균형정책은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은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외교, 안보정책이었지만,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은 애초부터 지켜질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고 체코슬로바키아는 자신의 안보를 프랑스와의 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프랑스와 영국의 대독일 유화정책으로 체코슬로바키아는 독일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영토와 인구의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4. 뮌헨협정(München agreement)

나치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첫 번째 목표로 정한 것은 수데텐 지역을 거주하는 독일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다. 독일은 이미 193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체코슬로바키아에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는데, 체코슬로바키아가 중부유럽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실제로 국제관계에서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역할을 하려고 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34~1935년 사이 서유럽 국가를 포함하여 중·동부유럽의 집단안보를 보장하는 ‘동유럽협정협정(Eastern Pact)’ 체결을 시도했다. 프랑스와 소련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들은 독일의 나치정권과 그들이 견지하는 침략적인 이데올로기를 우려하고 있었다.

18) Ort(2005), pp.81~87.

19) Stephen M. Walt, "Alliance Formation and the Balance of World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Vol.9, No.4 (Summer 1985), p.17.

20) 나이(2000), p.136.

동유럽협정은 소련, 독일, 폴란드, 발트 국가들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가 포함되어 있었고, 여기에 프랑스가 참여한다는 구상이었다.²¹⁾ 그러나 독일과 폴란드는 이 제안을 거부했다. 결국 1935년에 동유럽협정은 무산되고, 프랑스-소련 동맹과 체코슬로바키아-소련 동맹만이 남았다. 체코슬로바키아-소련 동맹은 프랑스가 체코슬로바키아 문제에 개입할 경우 소련이 여기에 개입한다는 유보적 동맹이었다.²²⁾

또한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첫 번째 공격대상으로 정한 이유에는 체코슬로바키아가 중·동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포함되었고 동시에 반나치 인사의 망명을 허용한 국가라는 점도 고려되었다.²³⁾ 이외에도 국제연맹을 비롯한 다뉴브 연맹, 동유럽 협정 등의 집단안보체제를 주도하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외교정책 역시 독일에게는 탐탁치 않았을 것이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위협한 표면적인 이유는 수데텐 지방의 독일인 문제였다.²⁴⁾ 1차 세계대전 이후 체코슬로바키아

의 영토로 인정된 수데텐 지역(도이치비멘, 수데텐란트, 도이치쉬드피렌, 뵘메르발트가우 등의 보헤미아 서쪽 국경)에 밀집해 있던 독일인들은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가 건국되자 국가로의 통합을 거부하고 ‘독일-오스트리아 공화국’을 선언하는 등 독일제국으로의 통합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²⁵⁾ 특히 1930년대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기존에 불법화되었던 독일민족사회노동당과 독일민족당이 주축이 된 수데텐독일당(Sudetoněmecká strana)이 결성되었다. 수데텐독일당은 1938년 4월 ‘칼스마트 8개항’을 발표해 독일인의 평등권과 같은 합리적인 요구에서부터, 나치의 활동 보장, 독일인만의 자치정부 구성, 독일에 충성하는 수데텐 지역의 분리 등 체코슬로바키아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²⁶⁾ 이미 1938년 9월 독일은 수데텐 독일인의 차별 문제를 들어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을 공언했다.

이에 따라 체코슬로바키아는 프랑스처럼 일련의 방어선을 구축해 독일의 공격에 대비했다. 이렇게 일단 독일의 공격을 늦추면 국내에서 방어전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고 프랑스를 포함한 외부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²⁷⁾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단독으로는 독일과 맞설 수 없었으며, 프랑스의 지원은 소련의 지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프랑스는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위협할 경우 영국에 지원을 요청할

21) 동유럽협정은 1933년 히틀러 등장 이후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동유럽에서도 로카르노 조약과 같은 국경 보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 협정은 3개의 조약으로 구성되었는데, 체코슬로바키아, 독일, 폴란드, 소련, 발트 3국과 핀란드 간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프랑스-소련 조약, 로카르노조약과 국제연맹의 원칙에 따른 일반 협정 등이 그것이다. Lisanne Radice, “The Eastern Pact 1933-1935: A Last Attempt at Eastern Co-operation”, *The Slav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55, No.1(1977), pp.45-64.

22) Robert Kvaček, “Czechoslovakia and International Security 1918-1938”, in ELK(ed.), *The Czech Contribution to the Peace and War in Europe: From Hussite Wars to NATO Membership* (Prague: Evropský literární klub, 2002), pp.154-156.

23) Kovaček(2002), p. 157.

24) 일부에서는 독일이 수데텐 지방을 요구한 이유가 야히모프(Jachymov) 우라늄 광산 때문이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자신의 세력권으로 편입시키려고 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Zbyněk Zeman, “Czechoslovakia Turns East 1945-1948”, in ELK(ed.), *The Czech Contribution to the Peace and War in Europe: From Hussite Wars to NATO Membership* (Prague: Evropský literární klub, 2002), pp.207-218.

25) 김신규, “2차 세계대전 이후 체코의 과거청산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0권 제4호(2006), pp.7-8.

26) W. V. Wallace, *Czechoslovakia* (London: Ernest Benn Limited, 1991), pp.205-206.

27)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미 프랑스는 반독일 동맹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1936년 3월 독일이 비무장지대인 루르 지방을 점령한 데 대해 영국과 프랑스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프랑스는 반파시스트 블록보다 자신의 안전을 더 잘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영국과 타협함으로써 대독일 유회정책을 따랐다. 프랑스는 독일의 서유럽으로의 팽창을 막기 위해 그에 대한 대가로 동유럽과 남동유럽을 독일에 주어버렸다. V. Olivová, *Československo v rozrušené Evropě* (Praha: Melantrich, 1968), p. 198.

것이고 영국은 프랑스의 패배를 지켜보지 않을 것이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국제연맹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결국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위협한다면,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소련 및 국제연맹이 집단안보체제를 발동할 것으로 기대했다.²⁸⁾

그러나 체코슬로바키아가 기대했던 집단안보체제는 가동되지 않았다. 독일이 평화조약을 위반한 데 대해 영국과 프랑스는 묵인했고 이로써 폴란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루마니아의 비민주 정부는 독일의 동유럽 팽창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독일과의 동맹을 통해 독일에 편승하려 했다. 특히 폴란드와 헝가리는 상실했던 영토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고 따라서 독일에 편승해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고 실지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다.

체코슬로바키아가 기대했던 영국과 프랑스의 도움도 없었다. 영국의 전략은 히틀러의 팽창을 동쪽에 한정시키려는 것이었고 이렇게 독일이 동쪽으로 팽창한다면 소련과 충돌을 일으켜 결국 좌 - 우의 두 전체주의 국가가 전쟁의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영국은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은 '중요하지 않은 국가'를 위해 히틀러와의 거래를 단절하려고 하지도 않았다.²⁹⁾ 프랑스는 영국의 유화정책을 따랐다. 이제 체코슬로바키아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자체 방위밖에 없었다.

외부의 지원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주된 요인이었지만, 1938년 이후 체코슬로바키아는 자체의 방어 체제를 갖추 수밖에 없

었다. 소위 내적 균형(internal-balancing)을 유지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다. 프랑스의 사례를 따라 독일과의 국경지대에 건립한 수많은 요새는 독일의 진군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모두 1만여 개의 진지로 구성된 독일 - 체코슬로바키아 방어선에는 동원 가능한 150만 명의 예비군이 배치될 예정이었다. 포병대도 충분한 무장을 갖추었고 소화기의 성능도 우수했다. 그렇지만 기갑부대와 공군력이 문제였고 기술력도 독일에 비해 뒤쳐져 있었다. 따라서 내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³⁰⁾ 1938년 9월 9일 총사령관 크레이치(L. Krejčí)는 최고 국방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군의 사기가 전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현재 독일군의 사기는 '수퍼 맨' 숭배 그리고 라인란트와 오스트리아를 무혈로 점령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높을 것 같지만, 이들이 우리 국경에서 일단 한번 패하게 된다면 사기는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과 적군의 실질적인 세력을 정확히 판단해야 하며,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독일의 목적은 흑해다. 우리에게 어떤 자비도 기대할 수 없다. 만

28) Kovacek(2002), p.157.

29) L. Cabada, "From Munich to Czechoslovak Renewal", in L. Cabada and Šárka Waisová (eds.), *Czechoslovakia and Czech Republic in World Politics* (Plzeň: Aleš Ceník, 2006), p.46.

30)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군부에서는 동원 가능한 42개 사단이 있어 독일군 48개 사단을 4-6주 동안 막아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만일 실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소련의 원조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재판을 받았던 독일군 사령관 빌헬름 카이텔(Wilhelm Keitel)은 당시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 국경지대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었으며, 만일 국경지대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경우 독일군은 최소 35개 사단을 동원해 6주 이상 전투를 벌여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독일은 서부전선에 배치된 5개 사단과 8개의 예비사단만을 남겨두게 되어 아주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히틀러는 자신의 암살 시도 이후 서둘러서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하려고 했다. Francis Dostal Raška, *The Czechoslovak Exile Government in London and the Sudeten German Issue* (Praha: The Karolinum Press, 2002); Josef Korbel, *Twentieth-Century Czechoslovakia*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77), pp.145~146.

일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절멸될 것이다.³¹⁾

1938년 9월 27일 프랑스는 체코슬로바키아를 위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고 영국의 체임벌린(N. Chamberlain)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우리가 거대하고 강력한 적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작은 나라를 얼마나 동정하는지와 상관없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작은 나라를 위해 영국을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는 없다”고 선언했다.³²⁾ 9월 29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 참가한 뮌헨에서의 협정을 통해 수데텐 지역의 독일 할양이 결정되었다. 독일은 더 이상의 영토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침략국을 만족시키고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영국은 그들의 동맹국이었던 체코슬로바키아를 독일에 넘겨주었다. 로카르노에서 시작된 유희정책은 일시적인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였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더 이상 집단안보와 동맹체제에 의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에 굴복했다.

1938년 9월 30일 외무장관 크로프타(Kamil Krofta)는 “……그들은 우리에게 뮌헨의 결정에 따라 참호를 그대로 둔 채 군대를 넘겨주라고 했다. 그들은 히틀러가 그들을 향해 더욱 무장할 수 있도록 결정한 셈이다”라고 언급했고³³⁾ “우리(체코슬로바키아)가 마지막이 아니다. 다른 이들도 곧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단언했다.³⁴⁾ 대통령 베네쉬 역시 “믿을 수 없다. 그들은 우리를 희생시켜 자신들을 전쟁이나 혁명에서 구했다

31) Korbel(1977), p.131.

32) Cabada(2006), p.50.

33) Olivová(1968), p.249.

34) Kovacek(2002) p.160.

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틀렸다”³⁵⁾고 언급했다.

뮌헨협정이 체결된 다음 날인 1938년 9월 30일 폴란드와 헝가리 군대는 체코슬로바키아 영토의 상당 부분을 점령했다.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 헝가리 국경은 11월 2일부터 소위 ‘비엔나 조정’으로 결정되었고 이것을 독일과 이탈리아가 승인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 시점에서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원래 영토의 30%와 인구의 1/3을 잃었다.³⁶⁾

체코슬로바키아가 외부의 지원에 의존한 국가이기는 했지만, 대통령 베네쉬가 그토록 쉽게 수데텐 지역을 독일에 양도한 것은 현재까지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³⁷⁾ 베네쉬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잠시 명어를 접어두더라도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민족이 말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수데텐 지역을 넘겨주었다고 밝혔다.³⁸⁾

베네쉬는 뮌헨에서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직전 소련 공사를 불러 체코슬로바키아가 독일과 전쟁을 벌인다면 소련이 개입할 것인지를 물었으나 곧 이를 철회하고 뮌헨협정을 받아들였다. 그는 각료회의에서 소련의 도움으로 체코슬로바키아가 독일과 전쟁을 시작한다면 영국과 프랑스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이며 향후 체코슬로바키아가 중부유럽 전체의 소비에트

35) Edvard Beneš, *Mnichovské dny: Paměti* (Praha: Svoboda, 1968), p.176.

36) J. Rataj, *O národní autoritativní stát, Ideologické proměny české politiky v druhé republice 1938-1939* (Praha: Karolinum, 1997), pp.13~14.

37) 1938년 9월 30일 대통령이 뮌헨협정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대통령이 이를 승인할 경우 헌법에 위배된다고 경고했고 시로비(J. Syroby) 국방장관은 군의 항복을 반대했으며, 공산당의 고트발드(K. Gottwald) 역시 대통령의 승인에 강력 항의했다. Beneš(1968), p.179.

38) Milá Lvova, *Mnichov a Eduard Beneš* (Praha: Svoboda, 1968), p.93; Miloš Hajek, *Od Mnichov k 15. Březnu* (Praha: SNPL, 1959), p.65.

화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³⁹⁾

5. 뮌헨협정 이후의 제2공화국

뮌헨협정 이후 체코슬로바키아 정부의 목적은 독일과의 협상이었다. 이제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안보를 책임지는 안전 보장자인 동시에 가장 강력한 위협국이었다. 1938년 10월에 들어선 보수적인 우파 정권은 무기 판매와 반유대주의 도입 등 히틀러의 모든 요구에 순응했다. 베네쉬는 하야했고 10월 말에 망명했다.⁴⁰⁾ 1938년 11월 30일 에밀 하하(E. Hácha)가 대통령으로 농민당의 베란(E. Beran)이 총리가 되었다. 제2공화국 정부는 독일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지 않았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 정부에 국제연맹 탈퇴, 독일에 따른 외교정책의 수정, 반유대주의 법령, 군 병력의 축소 등을 강제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인민당으로 통합되었고 인민당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유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1939년 3월 독일은 나머지 체코를 점령해 ‘보헤미아-모라비아 보호령’을 선언하고 슬로바키아를 독립시켰다. 이로써 독일은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를 차지함으로써 폴란드와 남·동유럽을 공격할 수 있는 최전선을 손에 넣었으며 서유럽을 공격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도 확보했다.⁴¹⁾

39) František Lukeš, “Poznamky k čs-sovětským stykům v září 1938”, *Československý časopis historický*, 16/5(1968), p.714.

40) Dejmek(2002), p.23.

41) 당시 독일은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1213대의 비행기, 2253문의 대포, 501문의 대공포, 1960문의 대전차포, 810대의 탱크, 60만 정 이상의 소총과 5만 7000정의 기관총, 11만 4000정의 권총 등을 징발했다. Korb(1977), p.158.

뮌헨협정 이후 들어선 제2공화국 정부의 안보, 외교정책은 독일로의 편승 혹은 유화전략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그러나 편승이 위협하는 적대국에게 양보함으로써 안전을 보장받거나 향후 일정 부분의 이익을 챙기는 전략이라고 할 때,⁴²⁾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에는 안전을 보장받지도 이익을 챙기지도 못했다. 따라서 제2공화국 시기 체코슬로바키아의 외교정책을 독일에의 ‘위협편승(bandwagoning for fear)’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것은 편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방적인 강제였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를 포기해 적대국의 침략행위를 완화시키려는 유화 역시 체코의 경우에 적용할 수 없는데, 수데텐 지역의 포기는 자국의 일부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뮌헨협정은 프랑스와 영국의 유화정책의 실패이며 독일의 경우 공갈전략(blackmailing)이 성공했음을 나타낸다.⁴³⁾ 뮌헨협정으로 인구와 영토를 상실한 체코슬로바키아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만 독일의 계속되는 위협이 없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독일은 뮌헨협정이 있는 지 5개월 만에 체코를 점령하고 슬로바키아를 독립시켰다. 결국 체코슬로바키아가 선택한 모든 전략은 실패했다. 오직 슬로바키아만이 독일에 편승함으로써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 또한 독일이 체코를 침공한 직후 폴란드는 체코를 침공해 영토를 차지했으며, 헝가리 역시 슬로바키아 남부와 카르파티아 루테니아를 점령했다.

상기한 대로, 1930년대 중반 독일에 나치정권이 들어선 이후, 체코슬

42) 케네스 왈츠, 『국제정치이론』, 박건영 옮김(서울: 사회평론, 2007), p.196.

43) 미어세이머는 뮌헨협정을 이끈 프랑스의 행동을 유화정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책임전가(buck-passing)로 평가했다. 프랑스가 1920년대와 1930년대 초반 동유럽 국가들과 동맹을 체결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동유럽 국가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독일의 관심을 동유럽 쪽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공갈전략은 강대국을 동맹국으로 두지 못한 약소국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된다고 했다. 미어세이머(2006), pp.578-579, pp.302-303.

로바키아가 선택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은 없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다만 기존의 집단안보체제가 유지되어 작동되기를 기대했고 프랑스, 소련과의 동맹과 소삼국협상에 의존했다. 그러나 체코슬로바키아가 기대했던 그 어떤 안보 보장책도 실현되지 못했다.

양차대전 사이 체코슬로바키아가 직면했던 위기의 근원을 히틀러의 등장이라고 한다면, 히틀러의 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의 부재 또한 체코슬로바키아 외교, 안보정책의 한계라 할 수 있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의존했던 집단안보는 결국 실현될 수 없는 이상이었다. 프랑스는 1920년대부터 '마지노선'을 구축하는 등의 방어 전략으로 돌아섰고 전면전을 피하려고 했다. 영국은 유화정책으로 체코슬로바키아를 희생시켜 독일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강화에 기여했다. 집단안보체제에만 의존하지 않았던 체코슬로바키아의 균형정책과 그 이후의 방법 역시 국가의 안보를 보장해주지는 못했다. 이 모든 결과로 인해 1930년대의 위기는 체코슬로바키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곧 유럽 전체 그리고 세계적인 위기로 전개되었다.

6. 맺음말

양차대전 사이 독일이라는 강대국의 위협에 직면한 약소국 체코슬로바키아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인 안보전략과 외교정책은 사실상 없었다. 이들이 선택한 집단안보체제는 이미 태생부터 작동불능 상태였고 프랑스와의 동맹은 곧 프랑스의 유화정책과 책임전가 등으로 깨졌으며, 소삼국협상은 가입국이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각자의 이해가 상이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렇다면 약소국의 안보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펠로폰네소스전쟁 당시 아테네인이 언급한 “강자는 가진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자는 그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2500년 전의 논리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인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의 외교, 안보전략은 친소노선으로 요약된다. 이미 2차 세계대전 중인 1943년 망명 정부 대통령 베네쉬는 ‘모스크바 회담’을 통해 친소노선을 확인했고 소련은 체코슬로바키아 망명 정부를 인정한 첫 번째 국가였으며, 체코슬로바키아가 요구한 전후 처리 문제를 거의 모두 수용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영향권으로 편입된 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발적인 선택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여전히 강대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약소국의 대외, 안보전략은 21세기 체코(1993년 슬로바키아와 분리 독립)의 외교정책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체코는 여전히 양차대전 사이에 채택했던 전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즉, 체코는 국제연합과 NATO 그리고 EU를 자신들의 안보(경제적, 인간적 안보를 포함하여)를 책임지는 안보 보장자로 인식하고 있으며,⁴⁴⁾ 양차대전 사이 프랑스와의 동맹을 미국과의 동맹으로 대체하여 미국이 유럽에서 안정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⁴⁵⁾ 한편 지역협력 강화를 의 교정책과 안보전략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와 ‘비셰그라드 4개국(Visegrad Four)’을 통해 불완전하지만 공동

44) Ort(2005), pp.341~350.

45) 최근 EU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체코는 폴란드와 더불어 미국의 MD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1세기 체코의 외교정책은 유럽연합과 NATO의 집단안보와 미국과의 동맹으로 요약된다. 김신규, “중동부유럽의 유로 - 회의론(Euro - scepticism) 연구: 회의론의 원인과 패턴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26권 2호(2008), pp.113~134.

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양차대전 사이의 기간과 현재의 상황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고 또 비록 군사력 위주의 힘의 논리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체코의 외교정책은 당시나 현재나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현재 위협국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정책과 안보전략은 집단안보체제, 인접국과의 동맹이지만, 또다시 유럽에서 위협국이 등장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여전히 모호하다. 그렇다면, 결국 체코와 같은 약소국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마사리크가 강조한대로, 체코의 지정학적 위치가 안보전략과 외교정책을 결정한다고 할 때, 체코의 외교, 안보 책임자들은 여전히 넓게는 집단안보를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친미 성향의 주변국을 포함해 ‘중부유럽 연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전히 체코는 ‘뮌헨’에서 서유럽 국가들의 배신과 이후 인접한 폴란드, 헝가리의 침략을 기억하고 있으며, 독일과 러시아라는 양편의 위협을 모두 인지하고 있어 친미를 중심으로 한 소위 ‘친 - 대서양주의(pro - Atlanticism)’를 군사적인 측면에서 안보의 핵심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논문 접수일 2009.06.26

심사 완료일 2009.07.28

Security strategy and foreign policy of Czechoslovakia between two world wars

Kim, Shin-kyu

East European and Balkan Institute. Hufs

In this paper, I discuss the Czechoslovakia's foreign policy between two world wars and try to inquire into collective security, coalition and self-defense measures on which Czechoslovakia based her foreign policy and security during the First Republic. Facing with the real threat of hostile power, it seems that it was impossible for a small and weak state, such as Czechoslovakia, to select an effective strategy with which it could survive. And finally, comparing the foreign and security strategy during the First Republic with the Czech's one after breaking up of Czechoslovakia in 1993, I guess the security strategy and foreign policy which Czech Republic can select is to be limited.

Since the Czech Republic still remember both the betrayal of western powers in München in 1938 and the invasions of Poland and Hungary directly after that agreement, and hold a doubt about the threat of Russia and Germany, she select so-called 'pro-Atlanticism' militarily on her security and foreign policy.

- Keywords

Czechoslovakia, München agreement, coalition, balance of power, collective security, little Entente